

 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
---	----------------	---

보도	2023.11.15.(수) 조간	배포	2023.11.14.(화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민생금융국 민생금융총괄팀 불법사금융대응1팀	책임자	팀 장	신동호	(02-3145-8266)
			팀 장	이진아	(02-3145-8129)
		담당자	수 석	이세용	(02-3145-8267)
			조사역	이상선	(02-3145-8121)
	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	책임자	부 장	신준식	(02-6710-0830)
		담당자	과 장	오희숙	(02-6710-0831)

**정부지원 · 서민금융 대출 사칭
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!**

- 동 불법대부광고 유형 및 소비자 대응요령 -

주요 내용

- 정부는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*」를 구성하여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중이며,
 - * 국무조정실·금융위·금감원·법무부·경찰청·과기정통부·행안부·방통위 등
- 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경기 부진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정부지원·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특별점검(23.6.19~10.31)을 실시
 - 그 결과, 지자체 등록대부업체(사이트 58개[36사]) 및 미등록대부 불법광고 사이트(225개) 등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등 관계기관 통보조치하였음
- 금융소비자는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래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

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
- 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!
- ②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합니다.
- ③ 개인신용정보 · 급전 · 앱 설치 등 요구시,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!
- ④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여 주세요!
- ⑤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세요!

I. 현 황

- **(개요)** 정부는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를 구성하여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중이며
 - 이에, 금융감독원은 정부지원·서민금융 등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
 - '23.6월부터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점검을 진행
- **(적발실적)** 주요 검색매체(구글, 페이스북, 네이버, 다음, 네이트 등)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대부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
 -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(36개사[업체수 기준]) 사이트 58개, 미등록 대부광고 225개 등 총 283개의 위반 사이트를 적발
 - 이들 사이트가 서민 취약계층을 현혹하여 고금리, 불법채권추심 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

- 불법대부광고 주요 유형 -

- ① "태극마크" 또는 "정부지원" 등의 문구를 통해 정부지원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
- ② "햇살론", "사잇돌"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
- ③ 언론사 뉴스 기사의 형식으로 금융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·과장 광고
- ④ 등록 대부업자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,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경고문구 미기재

- **(조치현황)** 금융감독원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(36개사, 사이트 기준 58개)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,
 - 미등록 불법대부광고 사이트(225개)는 방심위에 차단의뢰

II. 주요 적발 사례

1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적발 사례

【주요 키워드】 #정부지원, #태극마크, #대한민국 근로자 대상 대출지원, #서민 대상 채무통합, #저금리 대출 지원사업, #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, #직장인 정부지원 안심대출, #서민대출 지원상품, #서민금융

- "태극마크", 정부지원", "햇살론" 등 문구를 사용하여 정부 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고,
 - "무직자 저금리 대출가능", "연 3.2%"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
 - 또한, 불법업자는 성명·전화번호 등 **개인정보를 불법 수집**
- ⇒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추가피해 발생 우려

[적발사례 캡처 화면]

<p><'태극마크' 무단사용></p>  <p>국민행복기금 통합지원센터</p> <p>잘 살자 대한민국! 근로자가 경제다!</p> <p>직장인안심 전환대출</p>	<p><'정부지원' 문구 사용></p>  <p>정부지원 대출 상품출시!</p> <p>지금까지 신청! 당일 승인 당일 입금! 상환기간 최대10년</p> <p>가능 여부 확인하기</p>
<p><'햇살론' 등 용어 사용></p>  <p>대출 거절된 분도 100% 승인</p> <p>햇살론 재대출</p> <p>첫 번째 연소득 3,500만원 이하</p> <p>100% 승인 때 3개월 이상 재직하신분</p> <p>햇살론 정부지원 센터</p> <p>홍익요 35개 · 원로원 52명</p>	<p><'지역신용보증재단법' 문구 사용></p>  <p>·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</p> <p>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</p> <p>② 자금력이 부족한 근로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유동을 원활하게 지원</p> <p>5,000만원 3.2%</p> <p>월납입금 133,333원</p>

2 등록 대부업자 적발 사례

【주요 키워드】 #햇살론 출시, #디딤돌, #새희망홀씨, #서민 희망대출

- ① (정부지원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) 「서민금융법」 등에서 정부금융지원, 서민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의 사용을 금지*하고 있음에도

* 「서민금융법」 제80조②, 「대부업법」 제9조의3①

- “정부지원”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정부지원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
- “햇살론” 또는 “새희망홀씨”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

[적발사례 캡처 화면]



- ② (허위·과장 광고) 「대부업법」 제9조의3 제1항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

- 언론사 뉴스 기사의 형태로 소비자들을 기망하거나, "1금융", "은행권 대출"과 같은 허위 사실을 광고

[적발사례 캡처 화면]

<1금융권 사칭 허위 광고>	<언론사 기사 사칭 광고>
<p>✓ 본 상품은 1금융 은행권 신용대출입니다.</p> <p>✓ 본 상품의 납부기간은 최대 72개월 분할상환 12개월(연장가능)</p> <p>✓ 은행권 대출로써 과도상환 수수료는 일체 없습니다.</p> <p>✓ 상담접수 시 즉시 신용 확인 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.</p>	<p>뉴스 금융</p> <p>최대2억원까지 가능한 근로자 안심 금융서비스 출시</p> <p>최저 4% 금리부터 신청가능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유망업 97%</p>  <p>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한 '근로자 안심 금융서비스' 상품이 출시 되는 동시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있다고 한다. 기존 '고금리 대출'이나 '카드론' 등을 이용했던 서민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.</p>

- ③ (필수기재사항 미비) 「대부업법」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는 대부(중개)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①대부(중개)업 등록번호, ②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필수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

- 금융 소비자 대상 필수 기재사항을 안내하지 않고 광고

[적발사례 캡처 화면]

<p>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환기간 120개월 미만입니다.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 1,000,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%, 최대 이자율 20%로 대출할시 총 상환금액은 1,111,614원입니다. (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) 대표자 : 문효정 사업자등록번호: 832-27-01174 상호명 : 엠솔루션 대부중개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, 801호(반동, 가든타워빌딩) 업태 : 금융업 업종 : 대부중개업</p>	<p>대부(중개)업 등록번호 無</p> <p>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경고문구 無</p>
---	---

III .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※ 금융소비자는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!

💡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'최저신용자 특례보증', '소액생계비대출'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

💡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*하여 불필요하게 대부업체 이용시 발생하는 추가금리 부담 또는 불법추심 피해 가능성 예방

*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(☎1397)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전국 약 50개)

②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합니다.

💡 <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*>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

* 금융감독원 '파인'(fine.fss.or.kr) → '금융회사 정보' → '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'

💡 SNS(카카오톡, 텔레그램),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,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아야 함

③ 개인신용정보·금전·앱 설치 등 요구시,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!

💡 저금리 전환, 신용점수 향상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시 대출상담 즉시 중단

💡 특히, 사기범이 추가적인 대출안내를 위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클릭 금지

④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여 주세요!

- 💡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 받기 전에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·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*인지를 확인 요망

* 서민금융진흥원(kinfo.or.kr, ☎1397), 신용회복위원회(ccrs.or.kr, ☎1600-5500) 등

- 💡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'서민금융진흥원 사칭문자 진위확인'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칭문자 여부를 꼭 확인

⑤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불법사금융 여부를 의심하세요!

- 💡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 하지만 결국에는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

IV. 향후 계획

- 우리원은 앞으로도 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불법대부 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,
 - 인터넷 포털사가 동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·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